국가균형발전위원회

산업자원부

기획예산처

모두가 잘 살기 위한 첫 걸음

국가균형발전특별법

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· 산업자원부 · 기획예산처

국가균형발전특별법,
온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합니다

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이 실현되었지만,
지역간,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의
정신적·경제적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이 현실입니다.

세계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
진정 부강한 나라는 균형잡힌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.

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산업과 문화를 간직한 지역,
함께 잘 사는 방법을 나누며 커가는 지방,
특성있는 지방을 지원하는 중앙.

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한다면
전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.

국가균형발전특별법!
전국의 균형발전, 나아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 줄
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해답입니다.

찾아보기 <<<

Ⅰ.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: 수도권 집중 심화 4

Ⅱ.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6
1.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6
2.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 7
3.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8

Ⅲ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 10
1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모색 10
2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 11

Ⅳ.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내용 12
1.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12
2.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13
가. 낙후지역개발 촉진 13
나. 지역혁신역량 강화 14
다. 지역특화발전 추진 15
라.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16
마.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17
3.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 구축 18
4.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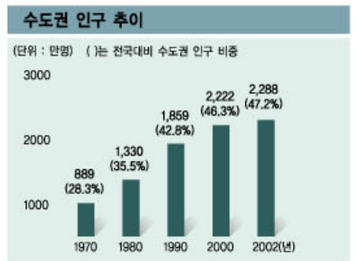
Ⅴ.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위하여 20

[I]
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
수도권 집중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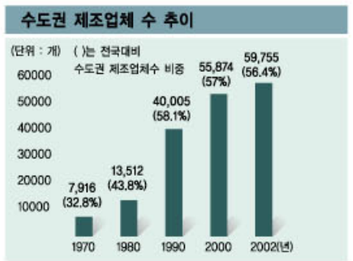
■ 수도권 집중의 현주소

●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.8%('00년 기준)이나, 인구는 46.3%, 중앙정부 부처는 100%, 기타 공공기관은 79%('01년 기준), 30대 대기업 본사는 88.5%('00년 기준), 10대 명문대학은 80%, 제조업체는 57%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총량 경제력의 52.6%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

수도권 인구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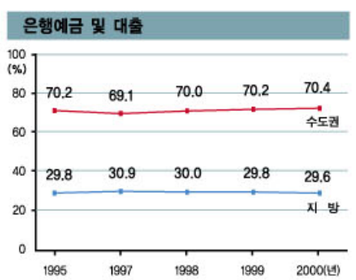


수도권 제조업체 수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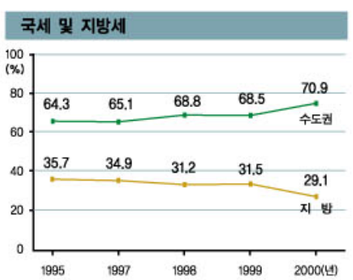


●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 집중도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 46.3 : 53.7, 은행예금 및 대출은 70.4 : 29.6,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은 70.9 : 29.1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(%, '00년 기준)

은행예금 및 대출



국세 및 지방세



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

● 제조업·금융·서비스 산업의 지역간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재정, 사회 기반 및 문화적 시설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면서, 대도시 지가상승, 교통혼잡, 주택부족, 공해발생, 지방대학의 약화,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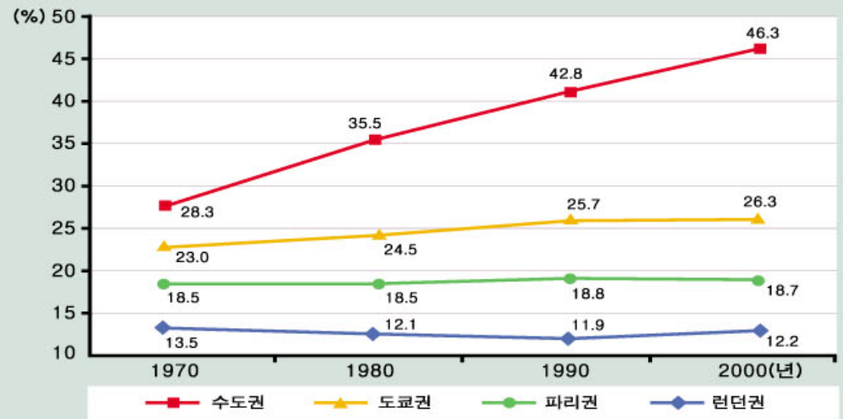
※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연간 사회적 비용이 10조원에 달하며, 2002년 말 현재 전국의 평균 주택 보급률은 100%를 넘어섰지만, 수도권은 92%, 서울은 82%에 불과합니다. 또한, 서울시 교통혼잡 비용은 4.7조원('00년 기준)에 달하는 실정입니다.

● 지역 갈등 심화와 지역주의 대두로 국민분열이 초래되고 있고 사회·경제적인 박탈감이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며, 궁극적으로 국가적 동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

● 중앙이 통제하는 지방화, 중앙의존적인 지방의 행태가 고착되어 가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 발전을 지연시켜 국가의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늦추고 있습니다.

수도권 인구비중의 국제 비교

● 외국의 경우, 주로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, 중앙집권형 국가 중 프랑스는 국가균형발전추진단(DATAR)을 설치·운영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힘입어 2000년 현재 파리권의 인구비중이 약 18% 수준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


3.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

■ 참여정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: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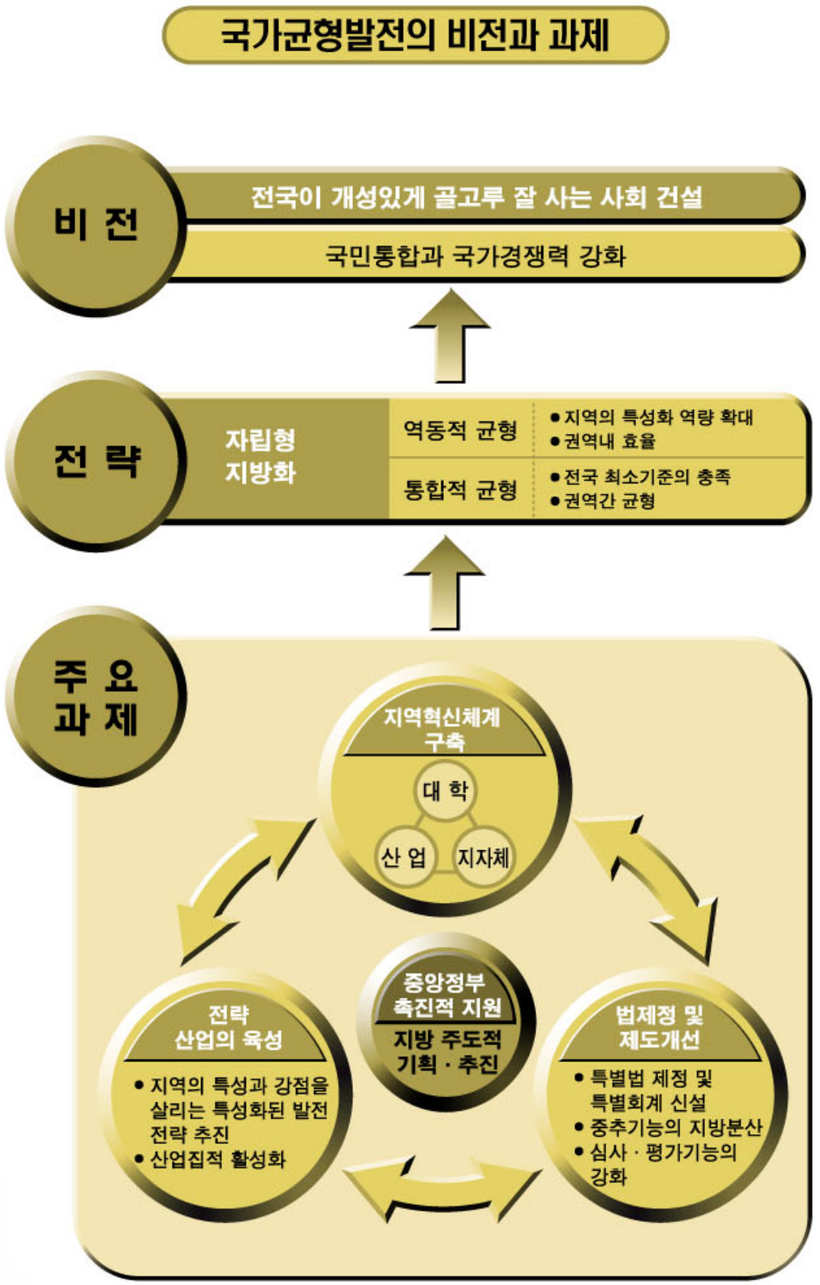
- 지방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, 모든 지역에 '지역혁신체계'를 구축해 경제 전반을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.

■ 균형발전의 비전 :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

- 균형 없는 집권-집중 발전모델에서 성장과 균형이 병행하는 분권-분산 발전모델로 전환하며, 기존의 불균형 발전을 극복하고 균형사회를 건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.
-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의 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.

■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

- 지역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특성화 발전전략으로 권역내 효율을 실현하는 동시에 '전국 최소기준'의 충족을 통한 권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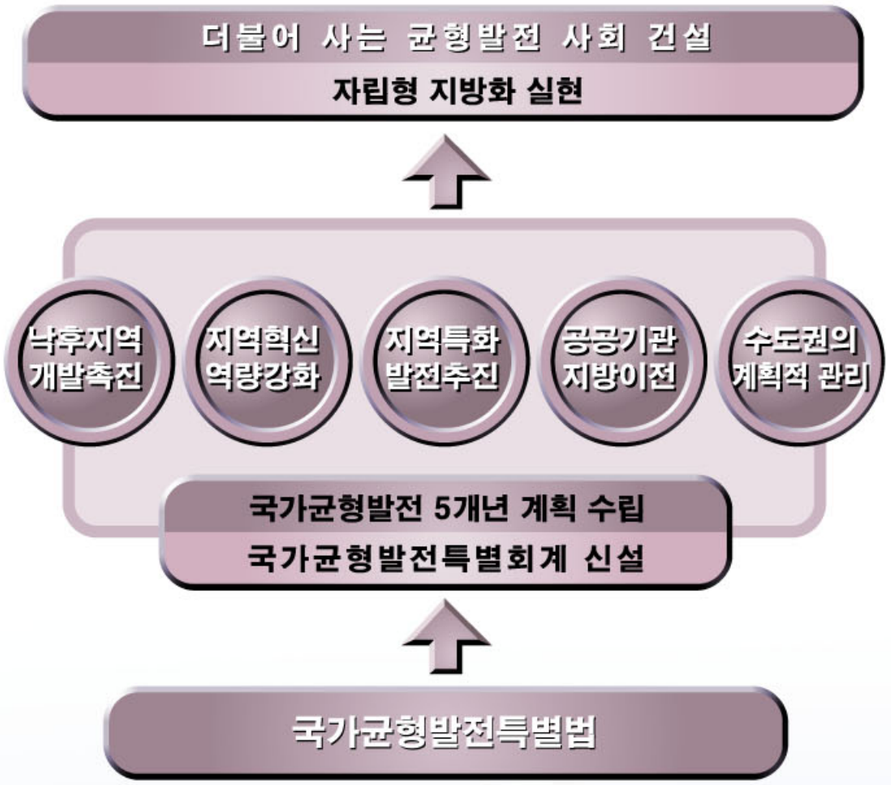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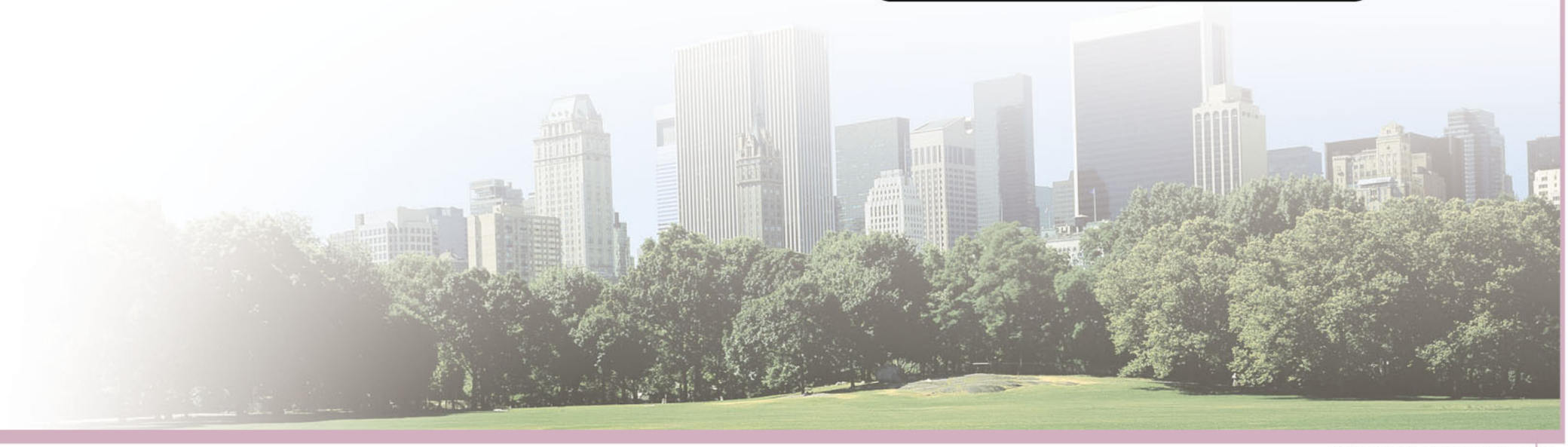
[Ⅲ]
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

1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모색

-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부상함에 따라 획기적인 지방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. 지방의 발전 없이는 중앙·지방 간의 균열과 갈등만 커지고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.
-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·기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선택이 필요합니다. 프랑스는 강력한 추진체계와 관련 예산의 통합지원으로 균형발전에 성공했습니다.
- 참여정부 첫 해인 2003년 중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합니다.
- 참여정부는 특별법 및 특별회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30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온 지방을 상승국면으로 반전시키고자 합니다.

2.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틀





[Ⅳ]
국가균형발전특별법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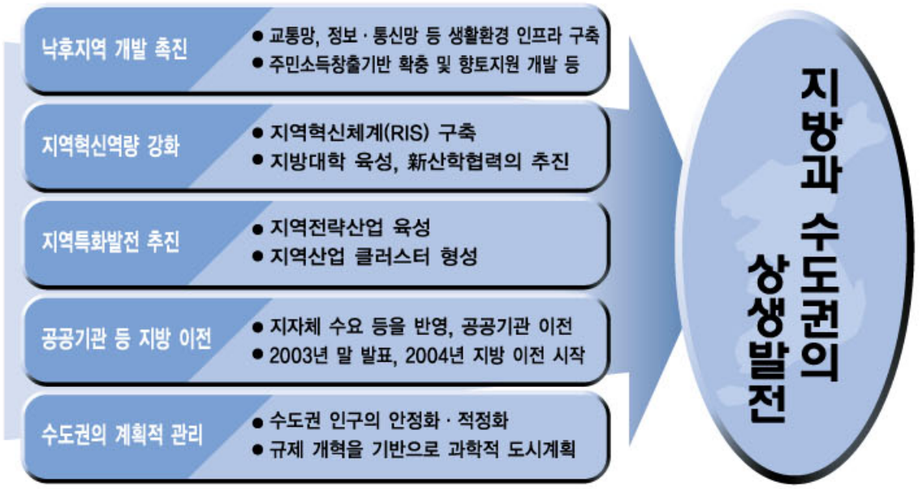
1.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

■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

-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방주도로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합니다.

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

2.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



나. 지역혁신역량 강화

■ 지역혁신체계(RIS) 구축

- 지역혁신체계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·기업·연구소·지방자치단체·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합니다.
- 지방에 대한 R&D 예산 지원비중을 확대하고,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견인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지방대학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2003년 말까지 지역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실무기구 선정을 완료하고, 지역혁신사례집 및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시행계획 등을 작성·배포할 예정입니다.

■ 新산학협력체계 강화

-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대학간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유도하는 新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및 지역대학의 연구기반 구축을 도모합니다.

다. 지역특화발전 추진

■ 지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

- 제조업, 문화, 관광, 물류, 유통 등 전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, 지역산업진흥사업(4대 및 9대 지역)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합니다.
- 국가산업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의 조화 차원에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합니다.

■ 지역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정책의 추진

-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산업에 대해 일관된 기획, 관리 및 평가체계를 확립하고, SOC 등 기존 하드웨어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산·학·연 등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킵니다.

■ 지역특성에 따라 '지역특화발전특구'를 설치, 지방의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 도모

-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특구를 제안하고, 중앙정부는 특구 지정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합니다.
- 2003년 말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하고, 2004년 상반기 중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합니다.

지역간 불균형이 줄어듭니다

나후지역의 발전이 촉진됩니다

라.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

■ 과도한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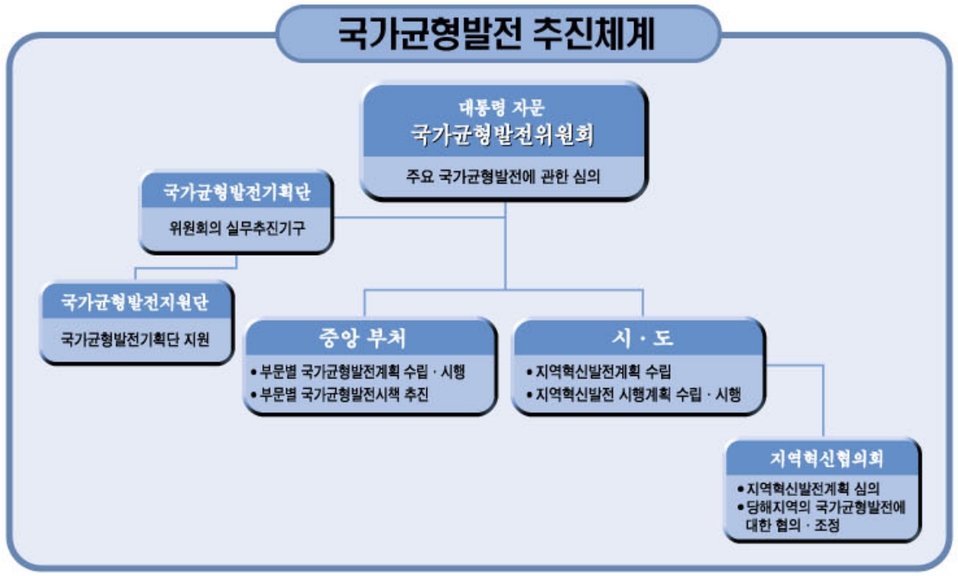
[redacted]

마.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

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(Win-Win) 도모

[redacted]

3.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



■ 국가균형발전위원회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하고 균형발전계획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입니다.
-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·의회의장협의체 추천위원,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지방 거주자로 구성합니다.

■ 국가균형발전기획단

- 위원회의 실무추진기구로서 위원회 소속 하에 설치되며, 관련 부처 및 시·도로부터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.

■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

-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지원단을,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.

■ 지역혁신협의회

-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의 심의기구로서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설치하며,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학계, 산업계, 연구기관,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합니다.

4.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

■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

- 보조금 등 지방 이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지방의 기획능력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, 포괄적 재정지원으로 실질적 지방재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합니다.

■ 국가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마련

-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세,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, 과밀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약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합니다.

■ 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구분 추진

- '지역개발사업계정(지역간 불균형 시정분야)'과 '지역혁신사업계정(특성화발전분야)'으로 구분·설치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도록 합니다.

구 분	**지역개발사업** (지역불균형시정)	**지역혁신사업** (특성화발전)
사업 내용	•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•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• 지역문화관광진흥사업 •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• 향토자원 개발 · 활용	•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• 지역전략사업 육성사업 •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• 지역 과학기술 혁신사업 • 공공기관·기업·대학의 지방 이전
주요 재원	• 주세 80% • 토특재원(개발부담금 등) • 농특세 등 타 특별회계 전입금 • 일반회계 전입금, 종합부동산세 등 기타	• 주세 20% • 통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•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•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

■ 특별회계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

각 부처의 칸막이식 지원	부처 연계 · 통합 지원
중앙부처 투자우선순위 중심	지자체 투자우선순위 중심
단위사업별 지원	포괄적 · 패키지식 지원
획일적 재정 지원	지방 재정여건 등에 따른 차등 지원
중앙이 제시한 예산확보 치중	지역혁신발전계획과 연계 제고

[V]
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위하여

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,
지방민이 스스로 혁신하고 일어설
참다운 희망과 자부심이 살아납니다

■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줄입니다

- 부처별로 분산된 지역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종합화·체계화하고, 지방이 주도하여 낙후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 낙후지역 개발을 추진하도록 합니다.
- 향토산업의 발전 지원, 지역별 차별화 개발전략 추진, 5都2村 활성화 등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 향토산업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성화 기조를 강화하도록 합니다.

■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

-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통해 역동적 지역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합니다. 이로써 지방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며, 지역이 종합적이며 총체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.
- 지방이 중앙과 수도권을 바라보며 외부의 도움을 받는데서 벗어나 지역의 혁신주체들끼리 협력하여 함께 학습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내생적 발전의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.

■ 지역기업이 살아나고 지방의 청년실업이 해소됩니다

- 지역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, 선도 지식 및 기술의 지원자로서, 창의적인 인력의 공급자로서 지방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중심축으로서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합니다.
- 지역 특성과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지역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지역에서 선정하고, 지역별 산·학·연 등의 혁신역량을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 결집하여 지역전략산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.
- 개방형, 통합형, 혁신지향형 新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합니다.

■ 지방의 개성이 살아나고 특성있는 발전이 촉진됩니다

-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, 관광(축제 등)을 진흥하고 환경친화적 공간 형성을 지원합니다.
- 지역의 합의와 노력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, 우수 인력 유치,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이루도록 합니다.

■ 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이 극대화되고,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

-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열을 극복하고, 모든 지역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도약 발전을 가능케 하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.
-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 혼잡 비용을 줄이고 여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.

www.pcbnd.go.kr

클릭하면
'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' 가 열립니다

■ 홈페이지 주소 : **www.pcbnd.go.kr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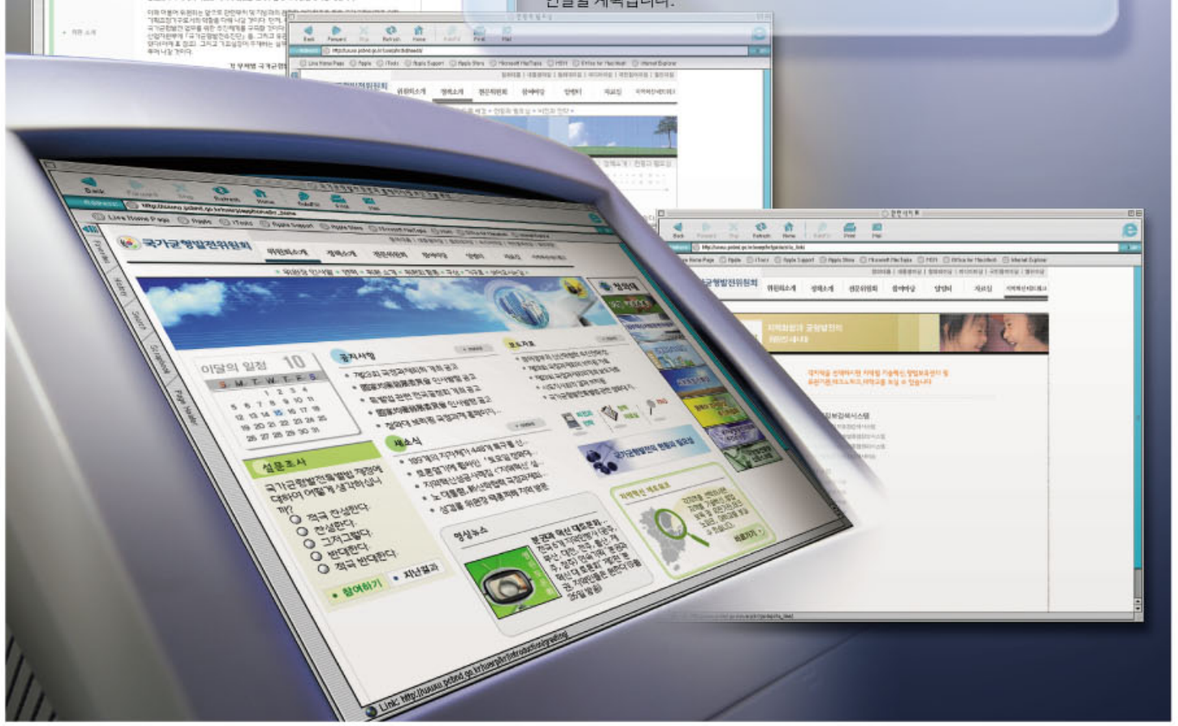
※홈페이지 주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영문명칭의 약어입니다.

■ 홈페이지 주요 내용

주요 메뉴	세부 항목
위원회 소개	인사말, 위원회 연혁, 위원회 위원 소개, 위원회 활동, 구성 및 운영, 기구표, 찾아오시는 길
정책소개	의제 도출 배경, 현황과 필요성, 비전과 전략
전문위원회	전문위원 소개, 지역혁신 전문위원회, 전략산업 전문위원회, 제도개선전문위원회, 수도권관리 전문위원회
참여마당	FAQ, Q&A, 토론방, 나도 한마디(자유게시판)
알림터	공지사항, 새소식, 보도자료, 언론보도/해명, 균형발전동향, 일정
자료실	정책자료실, 사진자료실, 동영상자료실, 설문조사, 뉴스레터, 신문스크랩
지역혁신 네트워크	시 · 도별 유관기관 링크

■ 지역혁신 네트워크

- '지역혁신 네트워크'는 유관기관 검색이 편리하도록 전국 지도를 중심으로 각 기관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링크해 놓은 것입니다. 초기화면에는 중앙단위 4개 유관검색시스템과 5개 연구회, 각 지역 소재 유관기관이 전국지도를 중심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.
- 현재 '지역혁신 네트워크'에는 지방자치단체, 대학교, 지역기술혁신센터, 창업보육센터, 테크노파크, 연구원 등 총 270여개 기관의 홈페이지가 지역별로 분류, 연결돼 있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민단체, 분권운동본부 등의 홈페이지와 연결할 계획입니다.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통편

주 소 | (우)110-760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-6번지 정부종합청사 6층

지하철 | 3호선 경복궁역, 5호선 광화문역

버 스 | 세종문화회관 앞 : 8, 8-1, 20, 23, 38, 53, 83, 83-1, 89, 135, 135-1, 135-2, 136, 142, 153, 156, 1005, 1005-1(좌), 45-2(좌), 601(공항버스), 1005-3(좌), 1007(좌)
교보문고 앞 : 6, 8, 32, 59, 89, 135, 135-3, 147, 150, 158, 428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찾아오시는 길

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화번호

직통전화	02) 3210-4803~5	**구내전화**	02) 3703-2685~90
지역혁신팀, 전략산업팀	02) 3703-2685~86	**기획팀, 홍보팀, 제도개선팀**	02) 3703-2688~90
대외협력팀	02) 3703-2687	**수도권관리팀, 정책연구팀**	02) 3703-2697~98
FAX	02) 3703-2694		